

# 트럼프 2기 재정정책, 산업 재편 효과에 초점

저자 : 배민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밴스, 하원의장 존슨이 연방 재정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Chat GPT로 이미지 생성)

- 개인소득세 감세 연장과 공제혜택 확대
- 친환경·복지 예산 줄여도 국방비 늘어, 지출 축소 효과 제한적
- 재정 건전성 우려 커지나, 다양한 보완책으로 지속 가능
- 감세의 구매력 증대 효과 제한적, 산업 포트폴리오 재편 지원
- 소비수요 둔화와 친환경 보조금 추가 축소에 대비해야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의 재정운용 기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요 대선공약인 감세정책을 비롯해 내년도 연방예산과 중장기 지출계획 등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재정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트럼프의 서명과 함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개인소득세 감세 연장과 공제혜택 확대

재정수입 변화의 핵심인 감세정책은 주로 개인소득세 감면에 집중되었다. 우선 트럼프 재임 1기였던 2017년에 2025년 말 일몰 종료되도록 도입한 **개인소득세율 인하 조치를 향후에는 시한이 없도록 연장했다**. 2017년 당시 트럼프는 세법상 최하위 소득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중하위 소득계층(연 소득 약 1만 ~ 20만달러)에 대해 3~4%p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2025년 말 추가 조치가 없으면 자동 종료되도록 했었다.

또한 **추가적인 면세와 공제 혜택도 신설·확대된다**. 중하위 소득층 표심 공약을 위해 팁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연 2만5,000달러,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연 1만2,500달러 한도로 공제되도록 했다. 8세 미만 아동 명의의 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공제혜택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노령층 소득에 대한 연 6,000달러 추가 공제는 오는 2028년 시한으로 늘린다. 아울러 상속세 면세 한도와 지방세 납입분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한도도 확대했다.

미국의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세율

소득 구간	오바마 재임기	세율 변화	트럼프 1기 감세	트럼프 2기 연장 및 영구화
\$0 ~ \$11,925	10.0%	—	10.0%	↑ 메디케이드·식료품 지원 삭감의 피해 집중 ↓ 팁·고령자소득 면세 소상공인 설비 구입 공제 혜택 확대 ↑ 상속세 등 공제 혜택 확대
\$11,926 ~ \$48,475	15.0%	-3.0%p	12.0%	
\$48,476 ~ \$103,350	25.0%	-3.0%p	22.0%	
\$103,351 ~ \$197,300	28.0%	-4.0%p	24.0%	
\$197,301 ~ \$250,525	33.0%	-1.0%p	32.0%	
\$250,526 ~ \$626,350	35.0%	—	35.0%	
\$626,350 초과	39.6%	-2.6%p	37.0%	

\* 2024년 1인 기준

기업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으로 언급됐던 법인세율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기업의 생산설비 구매와 R&D 같은 투자분에 대해 전액 공제한다**. 미국 내 투자를 증진시키고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율 인하의 입법 부담을 더는 대신 보다 직접적으로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 정부 및 기업의 투자지출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보다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 더 큰 투자유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 친환경·복지 예산 줄여도 국방비 늘어, 지출 축소 효과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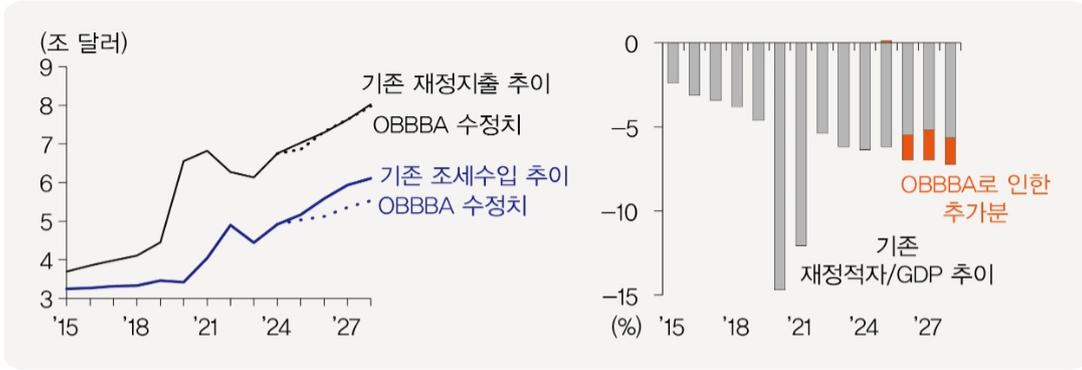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원전 및 화석 에너지원과 반도체, 국방 관련 지출 등에는 지원을 늘리는 리밸런싱 기조를 부각시켰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도입한 친환경 보조금들은 대거 중단될 예정이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소비자용과 상업용을 막론하고 2025년 3분기 말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지출, 더 나아가 태양광, 풍력발전 등 클린 에너지 전반에 대한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주도해 온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관련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간 민주당 주도로 확대해 온 **사회보장 지출도 줄인다**. 트럼프는 복지 개혁을 내세우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의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으로 월 80시간 근로와 미국 내 체류자격 보유 같은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저소득층이 혜택을 상실하고 관련 지출이 축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의회 예산처(CBO)는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관련 예산 지출에 대해 약 1조달러 감소를 예상하면서, 그 가운데 1,180만명분의 메디케이드 예산 9,300억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과거 ‘푸드스탬프’로 불렸던 최하위 소득계층 대상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의 수급요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지출은 크게 늘어난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골든 돔’이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 함선 건조와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군사용 드론 개발 등에 폭넓게 지원된다. 에너지 공급 구성도 바꾼다.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지원을 줄이는 대신 원전과 청정수소 보조금을 늘린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고 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지원은 2032년까지, 청정수소 관련 보조금은 2027년 착공분까지로 연장한다. 철을 정련하는 데 사용되는 석탄도, 화석 에너지원임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새로 포함시켰다.

트럼프 2기 산업정책은 반도체를 비롯한 미국 내 첨단제조업 투자 및 생산 확대를 주축으로 원자력 발전과 조선산업 회복을 우선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 산업을 육성하면서 미국산 중간재와 서비스 사용도 함께 늘리도록 하는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축소 우려가 제기되었던 반도체 보조금이 도리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배터리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AMPC)도 규모나 일정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 OBBBA 발효로 인한 미국의 연방재정 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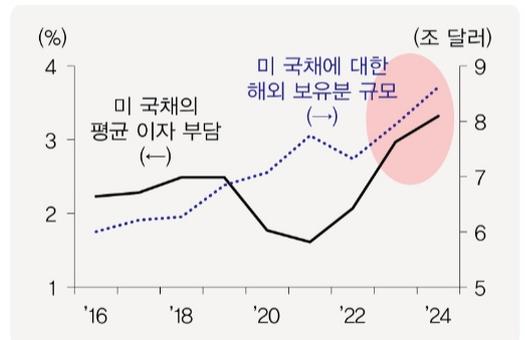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임기 4년간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4년 말 6.4%에서 2028년에는 7.2%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의회 예산국의 이같은 추산은 당초 올해로 개인소득세 감세에 대한 일몰 종료를 가정해 ‘재정적자/GDP’가 5.7%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던 기존 전망에 더해, 이번 감세로 인한 트럼프 임기 4년간 GDP의 1.5%에 해당하는 적자 확대분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재정적자 3%선을 크게 상회한다. 재정지출 증가율(연 평균 4.3%)은 명목경제성장률(4.0%)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억제되는 반면, 조세수입(3.0%)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친환경 예산을 크게 삭감하고 머스크 주도의 정부개혁위원회(DOGE)가 정부지출을 줄이는 활동을 폈지만,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을 웃도는 구도를 바꾸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경제활성화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의회예산처나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커,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 재정 건전성 우려 커지나, 다양한 보완책으로 지속 가능

이번 재정법에서 연방부채 한도가 기존의 36조달러에서 41조달러로 5조달러 증액되었지만, 미 연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은 민간의 자율성을 키워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그러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함께 나타난다. 특히 정책 효과가 기대한만큼 가시화되지 못하는 경우,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위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번 감세 및 재정정책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규모 감세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공화당 내 재정보수파 의원들이 복지지출 등의 더 많은 감축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 미 정부부채의 위험도 상승 추세



미국의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이미 100%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 같았으면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지고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나 통화정책 운용 여력에 대해 여타 국가들과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강등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채는 여전히 안정성과 규모,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하더라도 미국 국채 보유자들이 대거 매각에 나서고 다른 우량국채를 사들이는 행위가 당장 크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국제정치 무대에서 트럼프가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행보로 정세 변화를 주도하고 상당수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채의 패권과 주도력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두세 가지 추가적인 해결책을 더하려는 듯하다. 하나는 **관세협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양국 간 협상을 통해 국방비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부담을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고 관세수입이 늘면 그것으로 소득세수 감소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수입이 전년도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과 산업을 키움으로써 그 준비자산으로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과거 레이건 및 부시 정부 시기 전례를 보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공제혜택을 축소해 재정적자를 줄인 바도 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양적 완화 정책을 재개해 미 연준이 국채의 직접 매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 감세의 구매력 증대 효과 제한적, 산업 포트폴리오 재편 지원

트럼프 감세정책이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을 추가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책의 근간이 세율 자체의 추가 인하가 아닌 현행 세율의 연장에 있기 때문이다. 즉 현상 유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고용, 부동산 등 미국의 실물경기가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점도 소비확대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간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일부 구매력 확대가 예상된다. 소득구간별 기본 세율이 대체로 누진적인 구조여서, 감세 혜택 또한 기존 세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감세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표적 요인으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축소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 상실 부담이 감세를 통한 혜택보다 훨씬 커, 해당 개인 또는 가구의 구매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OBBBA의 소득계층별 영향**  
(연간 소득 대비 비율)



트럼프가 IRA 보조금을 축소·폐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친환경 산업 전반은 일대 조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전기차 전환 일정이 늦춰지고 청정에너지 도입 비용도 높아진다. 보조금 축소에 더해 판매량 감소가 수익성을 한층 악화시키며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압박할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의 국방과 외교, 에너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조선 및 철강, 방위산업, 원전 등에 대한 투자와 생산은 늘어날 전망이다. 금번 재정법만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향후 후속 입법 및 규제 도입이 뒤따를 수 있다. 미국산 중간재 사용을 장려하는 미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당장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조선 등의 분야는 우리나라의 생산능력을 활용하는 산업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국 견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배터리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대중 견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와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인식돼 이번에 존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혜택이 줄기 시작해 2033년에 종료되는 현행 일정이 유지된다. IRA에 들어있던 ‘우려 외국기관(FEOC)’ 개념이 이번 재정법을 통해서 ‘금지된 외국기관(PFE)’이라는, 보다 정량적이고 세분화된 개념으로 변경되고 적용 범위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금지된 외국기관’의 주요 구성 요소인 특정 외국기관(SFE)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완화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향후 이 기준을 신축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수요 둔화와 친환경 보조금 추가 축소에 대비해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재정정책은 기존 감세정책의 기초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산업 재편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관세협상의 과정과 성과, 중간선거 결과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향후 예산 및 정책 실행 과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감세 및 재정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제한적인 데 반해, 재정적자가 금리와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크고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누적돼 온 고물가는 현재의 2%대 소비자물가에서 소폭만 상승해도 소비심리에 주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연준이 정책금리를 내려도 국채발행 규모가 커 시장금리는 그만큼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집값은 높지만 거래와 착공이 부진한 주택경기도 신규 입주 및 이주를 통한 내구재 판매 신장 효과를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감세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축을 만회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친환경 보조금 축소의 파급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 전기차 판매 위축은 배터리를 비롯한 관련 소재·부품 등 B2B 사업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제조 승용차의 경우처럼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장벽의 부담까지 더해져 파급된다. 고객사가 생산지와 공급망 조정에 나서더라도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계획과 협력관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미국 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외국 기업에 주는 산업보조금 축소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뒀야 한다. 배터리 생산에 주어지는 AMPC에 대해 축소 시점이 현행의 2030년에서 더 앞당겨지고 특정외국기관(SFE) 거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등의 지급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 북미 사업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료광물 및 부품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면서 경쟁 구도 재편에 대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